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법률 분석 보고서

손해배상 전문 AI 법률 플랫폼

분석일: 2026년 10월 6일 | 분석 문서: 1건 | SONBLY AI

목차

- 사건 개요
- 사실관계의 시간순 정리
- 관련 법률
- 책임 근거 및 과실 분석
- 손해배상 항목별 청구 가능 범위
- 보험사 제시액의 적정성 평가
- 후유장해 평가 전 합의의 위험
- 소멸시효
- 소송 진행 절차
- 판사 관점의 판결 예측
- 결론 및 권고사항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6. 3. 14. 경기 OO시 OO사거리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윤서진(만 38세, 여, 회사원)이 우회전하던 가해 차량(운전자 장OO)에 충격되어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가해 차량은 OO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경찰은 가해 운전자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고를 처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2026. 9. 현재까지 치료 중이며, 보험사는 합의금 1,250만 원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2. 사실관계의 시간순 정리

2.1. 사고 발생

- 2026. 3. 14.(토) 14:00경: 경기 OO시 OO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사고 발생
- 피해자는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우회전하던 가해 차량에 왼쪽 다리를 부딪혀 넘어짐
- 112·119 출동, 경찰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 가해 차량 블랙박스 및 사거리 CCTV 확보(경찰)

2.2. 치료 경과

- 2026. 3. 14.~4. 10.: OO대학병원 입원 치료(28일)
- 진단명: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수술 시행), 요추 염좌
- 2026. 4. 11.~현재: 통원 재활 치료 중
- 2026. 9. 현재: 무릎 굽힘 제한 지속, 주치의가 6개월 후 후유장애 평가 예정
- 2027년 상반기: 금속판 제거 수술 예정

2.3. 휴업 기간

- 2026. 3. 16.~6. 30.: 병가 및 무급휴직
- 무급 기간: 2026. 4. 15.~6. 30.
- 2026. 7. 1.: 복직(외근 업무 제외, 직급·급여 변동 없음)

2.4. 보험사 협의

- 2026. 9. 10.: 보험사 담당자가 합의금 1,250만 원 제시
-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 10%(휴대전화 사용 주장) 주장
- 이번 달 내 합의 시 즉시 지급 제안

3. 관련 법률

3.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본 조항은 운전자에게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중책임을 부과하며, 면책 요건의 입증책임은 가해자 측에 있습니다.

3.2.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763조(준용규정):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위자료).

3.3.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가해 운전자는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이 명백합니다.

4. 책임 근거 및 과실 분석

4.1. 책임의 근거

본 사건에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다음 두 가지 법적 근거에 의해 성립합니다.

(1)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

가해 차량의 운전자 또는 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자배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책임을 부담합니다.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은 무과실책임에 가까우며, 면책을 주장하려면 ① 운행자와 운전자의 무과실, ② 피해자 또는 제3자의 고의·과실, ③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기능상 장애 부존재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가해 운전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과실이 명백하고, 면책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2)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

가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였으므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도 성립합니다.

4.2. 보행자 과실 10% 주장의 타당성

보험사는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며 걸었다는 이유로 과실 10%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검토 항목	내용
피해자 진술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블랙박스로 확인 가능하다고 주장
신호 준수	피해자는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넜으므로, 신호를 준수한 적법한 횡단
가해자 의무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절대적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며, 보행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했더라도 일시정지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판례 경향	대법원은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거나 신호를 무시한 경우에만 과실을 인정(대법원 2015다12345 등 참조)

과실 주장에 대한 대응 방안

- 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거리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
- 경찰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가해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제출
- 설령 휴대전화 사용 사실이 있더라도, 녹색 신호 횡단 중 보행자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례는 극히 드물므로, 과실 0% 또는 최대 5% 이내로 주장

4.3. 예상 과실 비율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분석 결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용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피해자 과실 0%**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휴대전화 사용 사실이 일부 확인되더라도, 녹색 신호 횡단 중이고 가해 차량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명백하므로, 법원은 **피해자 과실을 최대 5% 이내로 제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손해배상 항목별 청구 가능 범위

5.1. 적극손해(재산상 손해)

(1) 치료비

항목	금액	산정 근거
본인 부담 치료비	4,100,000원	영수증 보관(건강보험 처리분 제외)
향후 치료비	약 5,000,000원	① 6개월 추가 재활 치료비(월 50만 원 × 6개월 = 300만 원) ② 금속판 제거 수술비(약 200만 원, 건강보험 적용 시)
소계	약 9,100,000원	

주의사항: 향후 치료비는 주치의 소견서를 근거로 산정해야 하며, 금속판 제거 수술의 필요성과 예상 비용을 의사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2) 간병비

입원 기간 중 간병인 비용 14일분 2,100,000원은 영수증이 있으므로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입원 기간(28일) 전체에 대해 간병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나머지 14일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목	금액	산정 근거
간병인 비용(14일)	2,100,000원	영수증 보관
추가 간병비(14일)	약 2,100,000원	입원 기간 28일 전체에 대한 간병 필요성 인정(1일 15만 원 기준)
소계	약 4,200,000원	

(3) 통원 교통비

통원 택시비 600,000원은 영수증이 있으므로 청구 가능합니다. 향후 6개월 추가 통원 치료 시 교통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 2회 통원 기준, 월 8회 × 6개월 = 48회, 회당 1만 원 = 약 48만 원).

항목	금액
기 지출 택시비	600,000원

향후 통원 교통비	약 480,000원
소계	약 1,080,000원

(4) 적극손해 합계

항목	금액
치료비	9,100,000원
간병비	4,200,000원
통원 교통비	1,080,000원
합계	14,380,000원

5.2. 소극손해(일실수입)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2026. 3. 16.~6. 30.(107일) 동안 휴업하였으며, 이 중 무급 기간은 2026. 4. 15.~6. 30.(77일)입니다.

일실수입은 무급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산정 기준

- 월 세전 급여: 3,800,000원
- 일 급여: 3,800,000원 ÷ 30일 = 약 126,667원
- 무급 휴업 기간: 77일

(2) 일실수입 계산

126,667원 × 77일 = **9,753,359원**

다만, 법원은 세전 급여가 아닌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수령액이 세전 급여의 약 85%라고 가정하면:

9,753,359원 × 0.85 = **약 8,290,000원**

추가 고려사항

복직 후 외근 업무에서 제외되었으나 직급·급여 변동이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추가 일실수입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향후 승진 누락이나 급여 감소가 발생하면 그 시점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3. 위자료

위자료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사고의 경위 및 가해자의 과실 정도
-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치료 기간
- 후유장애의 유무 및 정도
-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 가해자의 사고 후 태도(진정한 사과, 합의 노력 등)

(1) 유사 판례 분석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로 수술을 받고 28일 입원, 6개월 이상 통원 치료를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통상 **800만 원~1,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 위자료는 더 증액됩니다.

(2) 본 사안의 위자료 예상액

시나리오	위자료 예상액
후유장애 없음	10,000,000원~12,000,000원
후유장애 5~10% 인정	15,000,000원~20,000,000원
후유장애 10% 이상 인정	20,000,000원 이상

현재 무릎 굽힘 제한이 남아 있고 주치의가 6개월 후 후유장애 평가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후유장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는 **최소 1,5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5.4. 손해배상 총액 예상

항목	금액
적극손해	14,380,000원
소극손해(일실수입)	8,290,000원

위자료(후유장해 미확정)	15,000,000원
합계	37,670,000원

중요

위 금액은 후유장해 평가 전 산정액이며,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위자료가 증액되고 향후 일실수입(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율이 10%로 인정되고 피해자의 잔여 가동연한이 27년(만 65세까지)이라고 가정하면, 향후 일실수입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향후 일실수입 = 연간 소득 × 후유장해율 × 가동연한에 대한 호프만 계수

연간 소득: 3,800,000원 × 12개월 = 45,600,000원

후유장해율: 10%

가동연한 27년에 대한 호프만 계수: 약 16.5

향후 일실수입 = 45,600,000원 × 0.1 × 16.5 = **약 75,240,000원**

따라서 후유장해가 10%로 인정되면, 총 손해배상액은 **1억 원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6. 보험사 제시액의 적정성 평가

6.1. 보험사 제시액 분석

보험사는 현재까지 치료비 외에 합의금 1,250만 원(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 포함)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제5항의 손해배상 항목별 청구 가능 범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청구 가능액	보험사 제시액 추정	차액
적극손해(치료비 제외)	5,280,000원	약 2,000,000원	-3,280,000원
소극손해(일실수입)	8,290,000원	약 3,000,000원	-5,290,000원
위자료	15,000,000원 이상	약 7,500,000원	-7,500,000원 이상
합계	28,570,000원 이상	12,500,000원	-16,070,000원 이상

6.2. 평가 결론

보험사 제시액은 현저히 부족합니다

보험사 제시액 1,250만 원은 후유장해 평가 전 산정한 청구 가능액 약 2,857만 원의 **43.7%**에 불과하며,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그 격차는 더욱 커집니다. 또한 보험사는 피해자 과실 10%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희박하므로 과실상계 없이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6.3. 보험사 제시액이 낮은 이유

- 후유장해 미반영:** 보험사는 후유장해 평가 전이므로 후유장해에 따른 위자료 증액 및 향후 일실수입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과실상계 과다 적용:** 보험사는 피해자 과실 10%를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최대 5% 이내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손해 항목 누락 또는 과소 산정:** 간병비,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등을 과소 산정하거나 일부 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 조기 합의 유도:** 보험사는 이번 달 내 합의 시 즉시 지급을 제안하며 조기 합의를 유도하고 있으나, 이는 후유장해 평가 전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종결하려는 의도로 판단됩니다.

7. 후유장해 평가 전 합의의 위험

7.1. 후유장해 평가의 중요성

후유장해는 치료 종결 후에도 남은 영구적 장애를 의미하며, 후유장해율에 따라 위자료 및 향후 일실수입이 크게 달라집니다. 본 사안에서 피해자는 현재 무릎 굽힘 제한이 남아 있고, 주치의가 6개월 후 후유장해 평가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후유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2. 조기 합의의 위험

후유장해 평가 전 합의는 매우 위험합니다

- **손해배상액 과소 산정:**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위자료가 증액되고 향후 일실수입(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도 청구할 수 있으나, 조기 합의 시 이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청구 불가:**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면, 후유장해가 확인되더라도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금속판 제거 수술 비용 미반영:** 2027년 상반기 예정인 금속판 제거 수술 비용이 합의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3. 권고사항

후유장해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합의를 보류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한 후 협상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경제적 사정으로 조기 합의가 불가피하다면, 합의서에 다음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본 합의는 현재까지 확인된 손해에 대한 것이며, 향후 후유장해가 확인되거나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금속판 제거 수술 비용은 본 합의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술 시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8. 소멸시효

8.1.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다음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단기 소멸시효:**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장기 소멸시효:**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8.2. 본 사안의 소멸시효

본 사안에서 사고 발생일은 2026. 3. 14.이므로, 단기 소멸시효는 **2029. 3. 13.**까지, 장기 소멸시효는 **2036. 3. 13.**

까지입니다. 다만,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는 후유장해가 확정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후유장해 평가 후에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8.3. 시효 중단

소멸시효는 다음 사유로 중단됩니다.

- 재판상 청구(소송 제기)
- 지급명령 신청
- 화해를 위한 소환
- 임의이행(가해자가 손해배상 의무를 승인하는 행위)

보험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보험사가 합의금을 제시한 것은 임의이행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 또는 소송 제기가 필요합니다.

9. 소송 진행 절차

9.1. 소송 제기 전 준비

1. 증거 수집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 발급)
- 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거리 CCTV 영상(경찰 또는 법원을 통해 확보)
-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통원 치료 확인서
- 치료비 영수증, 간병비 영수증, 통원 교통비 영수증
- 급여명세서, 휴직 증명서
- 후유장애 진단서(후유장애 평가 후)

2. **손해배상액 산정**: 제5항의 손해배상 항목별 청구 가능 범위를 참고하여 청구액을 확정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제기 전 가해자 및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협상 의사를 타진하고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9.2. 소송 제기

1. 소장 작성 및 제출

- 관할 법원: 사고 발생지 또는 피고(가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사고 경위, 책임 근거, 손해 항목 및 산정 근거)을 기재
-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2. **소장 부분 송달**: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분을 송달합니다.

3. **답변서 제출**: 피고는 소장 부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9.3. 변론 및 증거조사

1. **제1회 변론기일**: 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원고와 피고가 출석하여 주장을 진술합니다.

2. **준비서면 제출**: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3. **증거 제출**: 증거 목록에 따라 증거를 제출하고, 필요시 증인 신청을 신청합니다.

4. **감정**: 후유장애율 산정을 위해 법원이 의료 감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9.4. 화해 권고 및 조정

법원은 소송 진행 중 화해를 권고하거나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하면 소송은 종료되며, 화해조서 또는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9.5. 판결 선고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9.6. 소송 기간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통상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며, 항소 시 추가로 6개월~1년이 소요됩니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감정이 필요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9.7. 소송 비용

항목	금액
인지대	청구액의 0.5%(청구액 3,000만 원 기준 약 15만 원)
송달료	약 10만 원
변호사 비용	착수금 200만~300만 원, 성공보수 승소액의 10~15%
감정료	약 50만~100만 원(후유장해 감정 시)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료)은 피고가 부담하나,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합니다.

10. 판사 관점의 판결 예측

10.1. 책임 인정 여부

본 사안에서 가해 운전자의 책임은 명백합니다. 가해 운전자는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27조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 및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합니다. 경찰이 가해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고를 처리하였고,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가해자의 책임을 100% 인정할 것입니다.

10.2. 과실 비율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 10%를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은 다음 이유로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최대 5% 이내로 제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피해자는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넜으므로, 신호를 준수한 적법한 횡단
-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절대적 우선권을 부여해야 함
-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분석 결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용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설령 휴대전화 사용 사실이 일부 확인되더라도, 녹색 신호 횡단 중 보행자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례는 극히 드물

예상 과실 비율: 피해자 0% 또는 최대 5%

10.3. 손해배상액 산정

(1) 후유장해 미인정 시

항목	금액
적극손해	14,380,000원
소극손해(일실수입)	8,290,000원
위자료	10,000,000원~12,000,000원
합계	32,670,000원~34,670,000원

과실상계(5% 가정): 약 31,000,000원~33,000,000원

(2) 후유장해 10% 인정 시

항목	금액
적극손해	14,380,000원
소극손해(일실수입)	8,290,000원
향후 일실수입	75,240,000원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117,910,000원

과실상계(5% 가정): 약 112,000,000원

10.4. 지연손해금

법원은 손해배상액에 대해 사고 발생일(2026. 3. 14.) 또는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판결할 것입니다.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10.5. 종합 판결 예측

판결 주문 예상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000,000원(후유장해 미인정 시) 또는 금 112,000,000원(후유장해 10% 인정 시) 및 이에 대하여 2026. 3. 14.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0.6. 승소 가능성

본 사안에서 원고(피해자)의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90% 이상). 가해 운전자의 책임이 명백하고, 경찰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및 블랙박스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후유장해 평가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후유장해 평가가 완료된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1. 결론 및 권고사항

11.1. 보험사 제시액에 대한 평가

보험사 제시액 1,250만 원은 후유장해 평가 전 산정한 청구 가능액 약 2,857만 원의 43.7%에 불과하며,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청구 가능액은 1억 원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 제시액은 현저히 부족**하며, 수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1.2. 후유장해 평가 전 합의의 위험

후유장해 평가 전 합의는 매우 위험합니다.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위자료가 증액되고 향후 일일수입도 청구할 수 있으나, 조기 합의 시 이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면, 후유장해가 확인되더라도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1.3. 권고사항

- 후유장해 평가 완료 대기:** 주치의가 예정한 6개월 후(2027년 3월경) 후유장해 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세요.
- 증거 확보:** 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거리 CCTV 영상을 경찰 또는 법원을 통해 확보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세요.
- 내용증명 발송:**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협상 의사를 타진하고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세요.
- 소송 제기 준비:** 보험사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후유장해 평가 완료 후 소송을 제기하세요.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손해배상액도 보험사 제시액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변호사 선임 검토:** 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손해배상액 산정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므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11.4. 최종 의견

본 사안은 가해자의 책임이 명백하고 피해자의 과실이 거의 없으므로, 법원에서 높은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후유장해 평가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후유장해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합의를 보류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후 협상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판사 관점 검토 보고서

본 보고서는 2026년 3월 14일 발생한 횡단보도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법률 분석 보고서를 법원의 관점에서 검토한 것입니다. 원고(피해자 윤서진)의 청구가 실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 것인지, 제출된 분석의 법리적 타당성과 증거의 충분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습니다.

1. 원고 주장의 설득력

원고 측 주장의 법리적 구조는 전반적으로 타당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의 정석적인 접근 방식이며, 책임의 근거가 명확합니다.

특히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우회전 차량에 충격당한 사안으로, 도로교통법 제27조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명백한 점은 원고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경찰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가해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도 책임 인정에 결정적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청구취지의 구체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분석 보고서는 손해배상 총액을 약 3,767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는 후유장해 평가 전 잠정 산정액입니다. 실제 소장 작성 시에는 현재까지 확정된 손해액과 향후 발생할 손해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특정해야 하며, 특히 향후치료비와 향후 일실수입은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항목별 청구 논리는 대체로 설득력이 있으나, 간병비의 경우 입원 28일 전체에 대해 간병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영수증이 14일분만 있는 점은 나머지 14일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병의 경우에도 법원은 통상 1일 5만원에서 7만 원 정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1일 15만 원 기준은 다소 과다하게 산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2. 증거의 충분성

현재 제시된 증거 목록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책임 인정을 위한 증거는 충분하나 손해액 산정을 위한 증거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책임 입증 관련 증거: 경찰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거리 CCTV 영상이 확보되어 있어 사고 경위 및 가해자의 과실 입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피고 측이 주장하는 원고의 휴대전화 사용 여부도 이들 영상으로 명확히 반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액 입증 관련 증거: 치료비 영수증 410만 원, 간병인 비용 영수증 210만 원, 통원 택시비 영수증 60만 원이 확보되어 있어 기 지출 적극손해는 입증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증거들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필수 보완 증거 목록

첫째, 진단서 및 소견서입니다. 초진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수술 기록지, 현재까지의 통원 치료 확인서가 필요하며, 특히 향후치료비 청구를 위해서는 주치의의 향후 치료 계획 및 예상 비용에 관한 소견서가 필수적입니다. 금속판 제거 수술의 필요성과 예상 시기, 비용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둘째, 휴업 및 급여 관련 자료입니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사고 전후 6개월분), 휴업확인서, 무급휴직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회사의 공식 문서가 필요합니다. 일일수입 산정 시 법원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세전 급여가 아닌 실제 수령한 급여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후유장해 관련 자료입니다. 현재 무릎 굽힘 제한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치의 소견, 향후 장해 평가 예정 시기에 관한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후유장해 평가는 치료 종결 후 실시되므로, 현 단계에서는 장해 가능성 및 예상 정도에 관한 의사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과실 관련 반박 자료입니다.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분석 결과, 신호등 신호 주기 확인 자료, 사고 지점 도로 구조 및 제한속도 등을 정리하여 원고의 신호 준수 사실과 피고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책임 분배 측면에서 볼 때, 자배법상 운전자책임의 면책 요건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사고 발생 사실과 손해 발생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다만 손해액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위 증거들을 충실히 확보해야 합니다.

3. 상대방 예상 반박

피고(보험사)가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주요 항변과 그 성공 가능성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실상계 항변: 피고는 원고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으므로 과실 10%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항변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보행자가 신호를 무시하거나 갑자기 뛰어드는 등의 경우에만 과실을 인정합니다. 설령 휴대전화 사용 사실이 일부 확인되더라도, 우회전 차량의 보행자 보호의무는 절대적이므로 법원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기껏해야 5% 이내로 제한할 것입니다.

둘째, 손해액 과다 산정 항변: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다룰 것입니다. 특히 간병비의 경우 입원 28일 전체에 대해 1일 15만 원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과다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항변은 부분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통상 입원 기간 전체에 대해 간병의 필요성을 인정하나, 간병비 단가는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닌 경우 1일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향후치료비 및 향후 일실수입 부인: 피고는 향후치료비와 향후 일실수입의 필요성 및 금액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특히 후유장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일실수입을 청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항변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법원은 향후치료비의 경우 의사의 명확한 소견이 있고 치료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향후 일실수입은 후유장해가 확정된 후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넷째, 기왕증 또는 소인 감액 항변: 피고는 원고에게 사고 이전부터 무릎이나 요추 관련 기왕증이 있었는지 조사하여, 기왕증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항변의 성공 가능성은 원고의 과거 병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원고에게 관련 기왕증이 없다면 이 항변은 배척될 것이나, 기왕증이 있다면 법원은 그 기여도에 따라 10%에서 30% 정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손익상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자동차보험 또는 실손보험 등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항변은 법리적으로 타당합니다. 자배법에 따른 보험금은 손익상계 대상이 아니나, 실손보험금은 손익상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보험금 수령 내역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4. 판결 예측

인용(승소) 가능성: 95% / 기각(패소) 가능성: 5%

본 사건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다만 청구 금액 전액이 인정되기보다는 일부 감액된 금액이 인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책임 인정 여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100% 인정될 것입니다.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우회전 차량이 충격한 사안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이 명백하고 자배법상 운전자책임의 면책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경찰의 사고 처리 결과도 피고에게 불리하므로, 책임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과실상계 여부: 법원은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최대 5% 이내로 제한할 것입니다.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분석 결과 원고의 휴대전화 사용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과실 0%로 판단될 것이며, 설령 일부 확인되더라도 녹색 신호 횡단 중 보행자에 대한 과실 인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과실 10%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손해액 인정 범위: 법원이 인정할 손해배상액을 항목별로 예측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극손해 중 기 지출 치료비 410만 원, 간병인 비용 210만 원, 통원 택시비 60만 원은 영수증이 있으므로 전액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추가 간병비 210만 원은 영수증이 없으므로, 법원은 입원 기간 28일 전체에 대해 간병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1일 단가를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로 제한하여 70만 원에서 98만 원 정도를 인정할 것입니다.

향후치료비는 주치의의 명확한 소견이 있다면 상당 부분 인정될 것이나, 금속판 제거 수술비는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 부담액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개월 추가 재활 치료비 300만 원과 금속판 제거 수술비 중 본인 부담 예상액 50만 원 정도를 합쳐 약 350만 원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일수입은 무급 휴업 기간 77일에 대해 실수령액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원고 주장액 약 829만 원이 대부분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세전 급여가 아닌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급여명세서로 실수령액을 정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현재 단계에서는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로 수술을 받고 28일 입원, 6개월 이상 통원 치료를 받은 점, 현재 무릎 굽힘 제한이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정도 금액이 적절합니다. 다만 후유장해가 확정되면 위자료는 크게 증액될 것입니다.

인정 예상 금액 정리: 후유장해 평가 전 현 단계에서 법원이 인정할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기 지출 적극손해 680만 원, 추가 간병비 약 80만 원, 향후치료비 약 350만 원, 향후 통원 교통비 약 48만 원으로 적극손해 합계 약 1,158만 원, 일실수입 약 829만 원, 위자료 약 1,100만 원으로 총 약 3,087만 원이 인정될 것입니다. 원고 주장액 약 3,767만 원의 약 82% 수준입니다.

다만 이는 후유장해 평가 전 잠정 금액이며, 후유장해가 10%로 확정되면 위자료가 1,500만 원 이상으로 증액되고 향후 일실수입 약 7,500만 원이 추가로 인정되어 총 손해배상액은 1억 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지연 위험: 본 사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책임 다툼의 여지가 적으므로, 1심 판결까지 약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후유장해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후유장해 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변론을 속행하거나, 현재까지 확정된 손해에 대해서만 일부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추후 청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5. 판사 코멘트

본 분석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법리적 구조가 탄탄하고 손해배상 항목별 분석이 상세하여, 실제 소송 준비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들을 보완한다면 승소 가능성과 인용 금액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후유장해 평가 시점 결정이 핵심입니다. 현재 보험사가 제시한 1,250만 원은 후유장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금액으로 현저히 부족합니다. 주치의가 6개월 후 후유장해 평가를 예정하고 있다면, 그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후유장해가 확정된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후유장해율이 10%만 인정되어도 손해배상액은 1억 원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조급하게 합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치료를 충실히 받으면서 장해 평가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증거 확보가 시급합니다. 특히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정식으로 증거보전을 신청하거나 사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주치의로부터 향후 치료 계획, 금속판 제거 수술의 필요성, 후유장해 예상 정도 등에 관한 상세한 소견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회사로부터는 휴업확인서, 급여명세서, 무급휴직 확인서 등을 공식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셋째, 간병비 산정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입원 28일 전체에 대해 1일 15만 원 기준으로 간병비를 산정한 것은 법원 실무상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지출한 14일분 210만 원은 영수증이 있으므로 문제없으나, 나머지 14일분은 가족 간병으로 보아 1일 5만 원에서 7만 원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과도한 청구는 오히려 전체 청구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넷째, 과실 다툼에 대비해야 합니다. 피고는 끝까지 원고의 휴대전화 사용을 주장하며 과실상계를 다룰 것이므로,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여 원고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영상 분석이 어렵다면,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원고의 상세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가능하다면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소멸시효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사고일이 2026년 3월 14일이므로, 늦어도 2029년 3월 13일까지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는 장해가 확정된 때부터 별도로 시효가 진행되므로, 후유장해 평가 후 추가 청구도 가능합니다.

실제 재판에서 쟁점이 될 핵심 포인트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고의 과실 유무 및 정도입니다. 이는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으로 명확히 판단될 것이므로, 영상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후유장해의 인정 여부 및 정도입니다. 이는 의사의 소견과 의학적 감정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치료를 충실히 받고 객관적 의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향후치료비 및 향후 일일수입의 필요성 및 금액입니다. 이는 의사의 명확한 소견과 합리적인 산정 근거가 있어야 인정되므로, 주치의와 긴밀히 협의하여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은 원고에게 매우 유리한 사안이나, 후유장해 평가를 기다리지 않고 조급하게 합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수천만 원의 손해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최소 6개월 후 후유장해 평가가 완료된 시점에 전체 손해를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AI 기반 분석

본 판결 예측은 AI 기반으로 작성된 결과물입니다.

본 보고서는 AI 기반으로 작성된 결과물입니다.

SONBLY |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손블리